



# 미국 경기변동 패턴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오종석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박사과정(경제학))

## ■ 머리말

지난 10월에 발표된 노동부 일자리 보고서에서 9월 실업률이 7.8%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sup>1)</sup>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고 특히 7~8월 신규 일자리가 8만 6천 개 더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진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sup>2)</sup> 이렇게 2007년 말부터 약 5년 동안 8~10%로 높게 지속되었던 실업률이 8%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 회복 속도에 비해 고용의 회복 속도가 더딘, 이른바 ‘고용 없는 경기회복 (jobless recovery)’ 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현재 높은 실업률의 대부분이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1기 행정부가 경기부양책과 여러 차례의 양적 완화에도 실업률을 끌어내리지 못한 책임이 이번 선거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실업을 강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예컨대 미니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장은 미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1) 이후 10월 실업률이 7.9%로 높아졌다가 11월에는 7.7%로 더 낮아졌다. 그러나 11월의 낮은 수치는 일자리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라 태풍 샌디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2) 제네럴 일렉트릭 사의 전 최고경영자 잭 웰치는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오바마의 수석 경제참모 앨런 크루거와 전 노동부장관 로버트 라이시는 노동통계국 일자리 수치는 과거에도 빈번하게 수정되었으며 국가기관이 통계를 조작한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정상’적인 실업률이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임금상승 압박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 어느 정도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다.

특히 숙련편향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로 인해 노동수요와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한 연구는 비버리지 커브(Beverage curve)를 비교하면서 실업률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구인자리가 더 많다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숙련노동자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반면 구조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어떤 연구는 노동력 전체와 최근 대졸자의 실업률 통계를 비교하면서 대졸자의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나쁘게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졸자의 경우 기술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구조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sup>3)</sup>

그러나 최근 일부 거시 노동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경기변동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지적하는 흐름이 있다. 그 변화된 양상이란 다른 아닌 ① 고용 없는 경기회복과 ② 과거에 비해 덜 경기순응적(less procyclical)인 노동생산성이다. 이 글에서는 이 현상들과 그 원인을 설명하고, 미국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려면 경기적 실업을 낮추기 위한 재정·화폐정책에 더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역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 ■ 고용 없는 경기회복

고용 없는 경기회복 현상은 1991~92년 경기회복기에 처음 등장해서 이후 2002~03년 그리고 현 경기회복기까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분석들로는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아웃소싱이 늘어나서 회복기에 해외로 일자리가 재배치되고<sup>4)</sup>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금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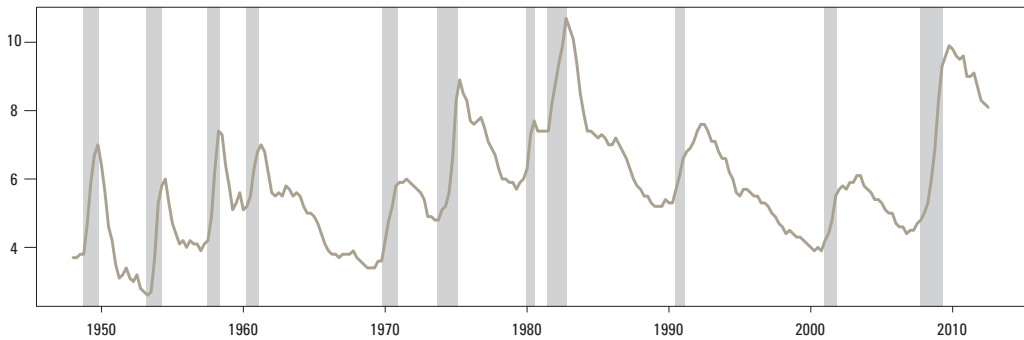
3) Bart Hobijn, Colin Gardiner, and Theodore Wiles, “Recent College Graduates and the Labor Market”, *FRBSF Economic Letter*,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Mar. 21, 2011.

4) Robert Pollin(2004), “Deepening Divides in the U.S. Economy, 2004: Jobless Recovery and the Return of Fiscal Deficits”,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 82*.

문과 같은 서비스 섹터가 늘어남으로써 고용 창출이 느리게 이루어진다는 주장들이 있다.<sup>5)</sup>

시계열 자료를 보면 실업률이 경기저점 이후 바로 회복하지 않고 몇 분기 후에 회복되는 시차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이와 같은 실업률 회복의 지체 현상은 경기회복 초기의 노동생산성(시간당 생산)의 폭발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산출량이 증가함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면 소수의 인원이 더 많이 생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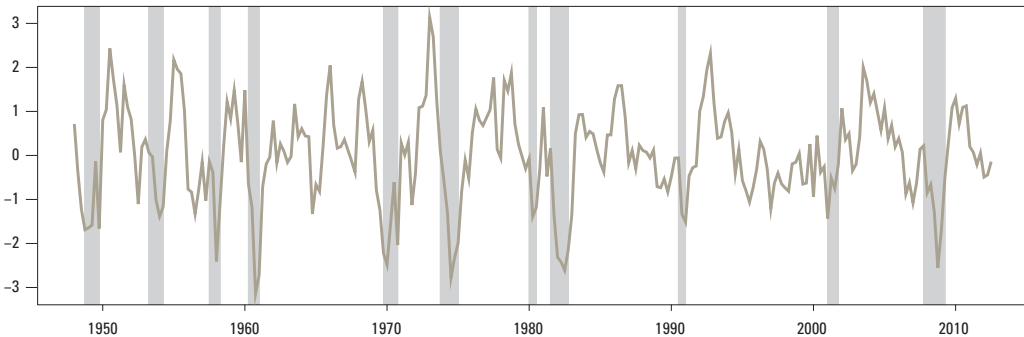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실업률



주: 경기침체기는 음영처리함.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그림 2] 미국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시간당 생산량)의 경기순환적 요소



주: 1) 경기침체기는 음영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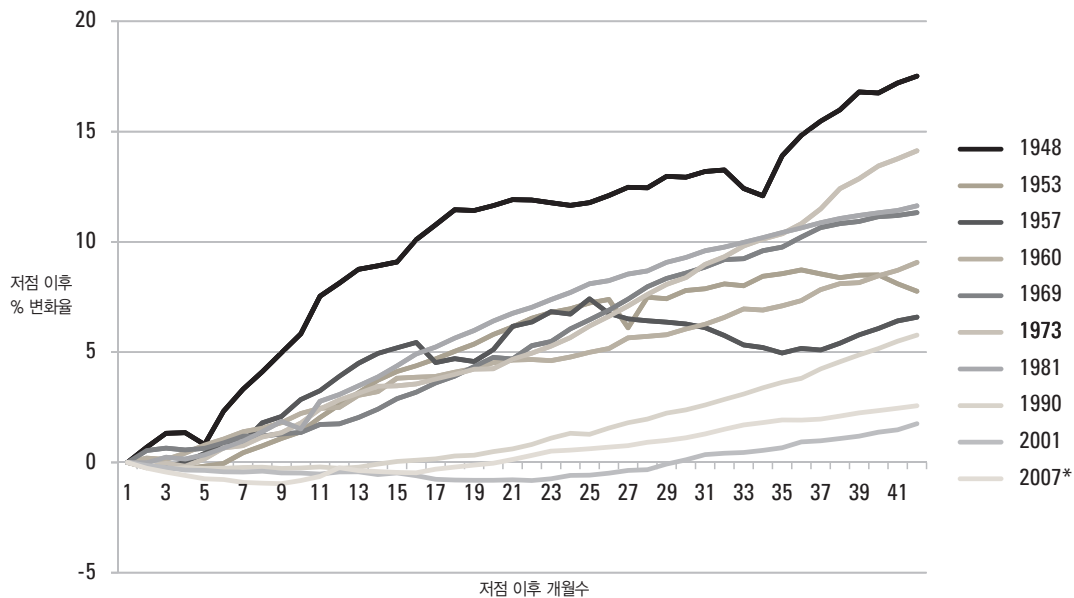
2) 호드릭-프레스컷 필터(HP filter)를 사용하여 경기순환적 요소를 추출함.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5) Bosworth Barry(2005), "A Jobless Recovery? Off-Shoring of Jobs Versus Productivity Growth at Home," <http://net.educause.edu/ir/library/pdf/ffp0503s.pdf>

그러나 국내총생산이 높은 일자리를 가져올 만큼 충분히 증가했는가라는 질문도 제기되어 왔는데, ‘생산 없는 회복(GDP-less recovery)’이 현 상황을 더 적절히 묘사한다면 고용의 더딘 회복이라는 수수께끼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은 경기회복기의 고용증감률을 놓고 과거 경기순환들을 비교한 것인데, 현 경기순환을 포함한 가장 최근의 세 경기순환에서의 일자리의 더딘 회복이 과거의 빠른 회복들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산출량 역시 과거의 경기순환들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그림 4).

[그림 3] 경기회복기 비농업부문 고용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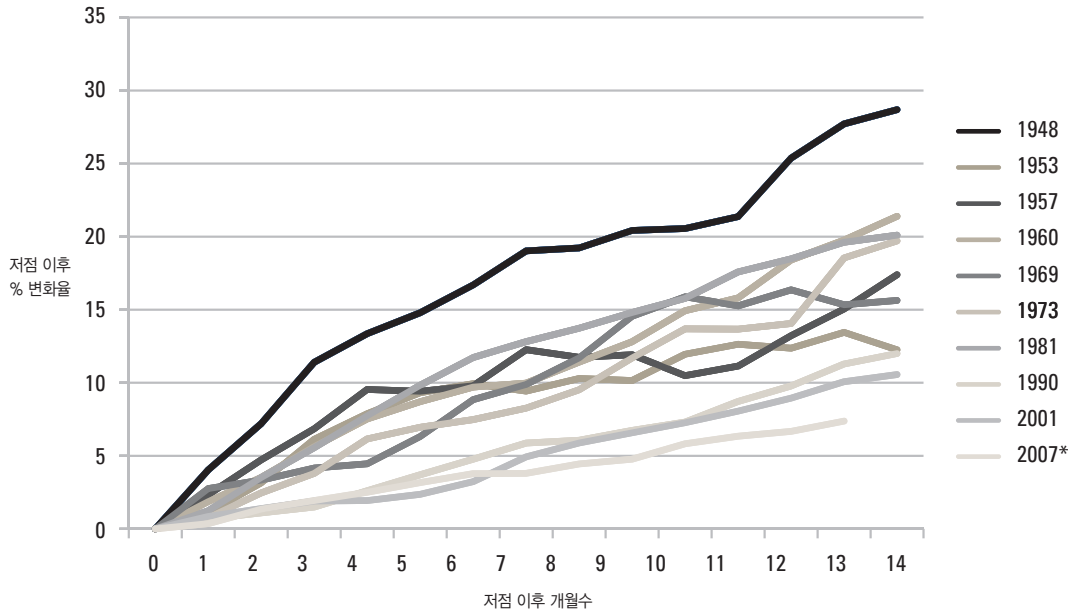


주: 더블딥으로 이어진 1980년 경기변동은 제외함.

자료: 미네소타 연방준비은행.<sup>6)</sup>

6) 미국 미네소타 연방준비은행 사이트에서 과거 경기순환기들의 경기침체/회복 시기 고용/국내총생산 증감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http://www.minneapolisfed.org/publications\\_papers/studies/recession\\_perspective](http://www.minneapolisfed.org/publications_papers/studies/recession_perspective)

[그림 4] 경기회복기 실질국내총생산 증감률



주: 더블딥으로 이어진 1980년 경기변동은 제외함.  
 자료: 미네소타 연방준비은행.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오쿤의 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산출량의 1% 감소는 노동생산성의 1/3% 감소, 총노동시간의 2/3% 감소로 분해할 수 있다. 그 중 총노동시간의 감소는 다시 1/3%의 고용률의 감소(즉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1/3%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고용당 노동시간의 감소로 분해된다. 이는 아래와 같은 국내총생산 분해식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Y \equiv \frac{Y}{H} \frac{H}{E} \frac{E}{L} \frac{L}{N} N$$

8) Engelbert Stockhammer(2012), "Rising Inequality as a Root Cause of the Present Crisis", *Political Economy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number 282, UMass Amherst.

여기서 Y는 국내총생산, H는 노동시간, E는 고용량, L은 노동력, N은 생산가능인구이다. 이를 증가율로 다시 표현하면,

$$\text{국내총생산 증가율} = \text{노동생산성}(Y/H) \text{ 증가율} + \text{고용당 노동시간}(H/E) \text{ 증가율} + \text{고용률}(E/L) \text{ 증가율} + \text{노동시장 참가율}(L/N) \text{ 증가율} + \text{생산가능인구}(N) \text{ 증가율}$$

산출량과 실업률의 관계만 놓고 볼 때, 3%의 산출량 증가는 실업률의 1% 감소로 이어지는 셈인데, 산출량과 실업률이 일대일로 변하지 않는 것은 국내총생산 증가의 일부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앞서 [그림 2]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회복 초기국면에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도약하는 것은 총노동시간의 증가율,<sup>7)</sup> 특히 고용률의 증가율이 생산물의 회복(즉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에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 초기국면의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동전의 양면 격인 노동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실물적 경기변동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술적 충격이 회복기에 생산성의 비약을 가져왔고 그 결과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로버트 고든은 팽창기 말기에 기업들이 과잉고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경기회복 초기에는 고용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기업의 행태적 측면을 지적한다.<sup>8)</sup> 즉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실물적인 기반 없이 단지 외형적으로 노동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로 표현될 뿐이라면서 실물적 경기변동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한다.

## ■ 덜 경기순응적인 노동생산성

1980년대 이후 변화된 양상으로 지적되는 것으로서 두 번째는 ‘덜 경기순응적’인 노동생산

7) 총노동시간의 증가율이란 두 번째 식에서 우변의 첫째 항인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제외한, 고용당 노동시간, 고용률, 노동시장 참가율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들의 합이다.

8) 그는 이를 팽창말기(End-of-Expansion)현상이라고 일컫는다. Robert Gordon(2010), “Okun's Law and Productivity Innov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0(2).

성이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경기회복 초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서는 경기순환 전 기간 동안의 노동생산성의 변동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노동생산성은 경기순응적이라고 여겨져 왔었고, 앞절에서도 오쿤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산출량과 실업률이 일대일로 변하지 않는 것은 국내총생산 증가의 일부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결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의 노동저장(labor hoarding)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기업들은 경기침체에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는 대신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해고비용(예컨대 제반 법적 비용, 재충원 시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용 등)이 크기 때문이다.

로버트 고든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1985년 이후 전혀 달라졌다. 즉 총노동시간이 산출량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는 대신 노동생산성의 반응은 약화되었으며, 이는 노동생산성이 덜 경기순응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침체에 기업들이 노동저장으로 반응하는 대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해고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달라진 기업행태가 총노동시간, 특히 고용률이 산출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표 1).<sup>9)</sup>

〈표 1〉 산출량의 변화에 대한 장기반응

종속변수	오쿤의 법칙	1963:I-1986:I	1986:I-2009:III
노동생산성	0.33	0.22	0.03
총노동시간	0.67	0.74	1.27
고용당 노동시간	0.17	0.28	0.34
고용률	0.33	0.40	0.64
노동시간참가율	0.17	0.03	0.15

자료 : Gordon(2010).

9) 이는 고용률이 산출량의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앞절의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대한 설명과 일견 상충되어 보인다. 그러나 고용 없는 경기회복은 경기회복 초기국면에 한정된 현상이다.

## ■ 맺음말

오바마 행정부 2기가 곧 출범하지만 고용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재정적자와 재정절벽으로 향후 경기부양책을 쓰기도 힘든 상황이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역시 높은 실업률의 지속에 기여하였음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미국을 비롯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들이 대불황기에 높은 실업률을 보였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0)</sup> 또한 규제된 노동시장과 높은 임금률을 가진 국가들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들도 있다. 이는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sup>11)</sup>

이 글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이미 세 번의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생산과 고용 회복의 정도에서 앞의 위기들보다 심각하며 ‘대공황’과 비견되어 ‘대불황’이라고 불리기조차 한다. 대불황의 늪에서 탈출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을 통한 유효수요적 접근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 역시 요구된다. **KLI**

10) Murat Tasci and Mary Zenker(2011), “Labor Market Rigidity, Unemployment, and the Great Recession”, *Economic Commentary*,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11) David Howell et. al.(2005), *Fighting Unemployment: The Limits of Free Market Orthodoxy*, Oxford; Robert Vergeer and Alfred Kleinknecht(2011), “The impact of labor market deregulation on productivity: A panel data analysis of 19 OECD countries(1960~2004)”,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33, pp.371~408.